

北韓의 憲法上 基本權 保障과 그 實際

張 明 奉*

<目 次>

- | | |
|----------------------------|--------------------------|
| 1. 序 言 | (4) 未遂・豫備・過失 및 共犯의 處罰 |
| II. 北韓 憲法上의 基本權 保障 | (5) 不申告의 犯罪化와 連坐制 |
| 1. 基本權의 性格 | 2. 北韓 刑事訴訟法의 人權侵害의 要素 |
| 2. 基本權 保障의 基礎—集團主義 原則 | (1) 北韓 刑事訴訟法의 人權否定的 規定 |
| 3. 基本權의 體系와 分類 | (2) 北韓 刑事訴訟 節次上 人權侵害의 要素 |
| III. 北韓의 司法制度와 運營 | V. 北韓의 人權狀況 |
| 1. 北韓의 司法機關의 機能 | 1. 北韓에 있어서의 人權現況 |
| 2. 北韓의 司法制度上의 問題點 | 2. 北韓의 國際人權規約加入과 그 履行實狀 |
| (1) 司法權獨立의 否定 | 3. 北韓 憲法上의 基本權 規定과 그 實態 |
| (2) 二審制 | (1) 公民의 政治的 權利 |
| (3) 裁判의 非公開 | (2) 公民의 社會・經濟的 權利 |
| (4) 訴訟節次에서 의 敎의 統制 | (3) 公民의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
| 3. 한 體驗者의 證言을 통해 본 北韓의 裁判 | (4) 其他의 權利 |
| IV. 北韓의 刑法 및 刑事訴訟法과 基本權 保障 | VI. 結 語 |
| 1. 北韓刑法의 人權侵害의 要素 | |
| (1) 刑罰法規의 類推適用 | |
| (2) 刑罰選及適用의 認定 | |
| (3) 社會的 危險性의 強調 | |

I. 序 言

오늘날 급속히 이루어지는 東歐 共產國家들의 大變革은 그 內容을 보면 自由化, 開放化, 民主化, 人間化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 法科大學 教授

말하면, 그것은 人間의 普遍的 價値인 自由와 人權의 要求라는 점에서 共通性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蘇聯 共產黨 書記長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社會主義 思想과 革命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論文에서 밝힌 '人間의 얼굴을 한 民主主義의 社會主義' 國家建設의 선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기실 共產圈 國家들의 變化의 內容을 잘 살펴보면 그 核心을 이루는 것은 人權의 保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東歐 共產國家들의 變化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國家와 理念의 背景을 같이하는 北韓의 변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東歐 諸國의 大變革이 '主體思想'에 의해 지배되는 北韓式 社會主義의 基本立場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¹⁾ 北韓의 조선중앙방송은 "당의 명도를 확고히 견지하여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을 표방하고, "김일성·김정일의 명도를 떠나서는 오늘의 번영도 내일의 진도도 말할 수 없다"²⁾고 주장하여 社會主義와 金日成 唯一支配體制를 고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共產圈 國家들의 變化에 따른 時代的 潮流를 北韓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內部狀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對應策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근 北韓의 海外公館長會議에서의 "한국을 비방하는 인동을 삼가라"는 黨中央의 指示內容은 그 단편적인 조짐일 수도 있다.³⁾ 이와 같은 시점에서 北韓의 人權狀況을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北韓의 開放化와 民主化는 한반도에서 平和와 統一의 제일보를 내딛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北韓은 自由와 人權의 死角地帶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北韓住民의 恆格의 人權狀況에 대한 각별한 關心이 요청된다. 그러나 여기서 北韓의 基本權을 고찰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自由民主主義憲法과 社會主義憲法이 서로 다른 基本的 理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憲法上の 基本權을 自由民主主義理念을 바탕으로 한 우리 憲法의 그것과 상대적으로만 比較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 1989년 11월 26일자 「프라우다」紙에 掲載된 論文, 우리 말로 번역된 이 論文의 全文은 「中蘇研究」, 第13卷 4號(漢陽大 中蘇研究所, 1989~90, 겨울), pp. 226~245.

2) 鄭典烈, "北韓의 開放化와 民主化, 그 可能性과 展望", 國際人權擁護韓國聯盟 주최 제41회 세계인권선언기념 심포지움 發表文(1989.12.12), p. 89.

3) 조선중앙방송, 1989년 11월 13일 보도; 上揭 發表文, p. 89.

4) 「朝鮮日報」(社說), 1990년 2월 22일, p. 3.

모든 社會現象, 體制, 制度, 理念을 떠나 본질적으로 人間으로서의 權利의 存在라는 當爲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人權이 없다고 할 것이다.⁵⁾

本稿에서는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 基本權에 관하여 고찰하되, 制度的 側面과 實際의 側面의 양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北韓의 硬直性和 閉鎖性이 人權實態의 分析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의 歸順者들의 證言, 北韓訪問者들의 見聞과 權威 있는 國際人權團體들의 人權報告書, 美國務部の 人權報告書 등은 좋은 資料를 제공해 주고 있다.

거듭말하거니와 共產國 國家의 變화가 非人間的 統治體制에 人間的 要素를 부활시키자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北韓社會의 人權은 매우 중요하다. 北韓에서의 人權狀況의 改善은 北韓의 開放化와 民主化의 내용이 되는 것이며, 北韓의 開放化와 民主化는 곧 南北韓간 平和의 基礎條件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南北統一의 始發點이 되는 것이다.

II. 北韓 憲法上の 基本權 保障

1. 基本權의 性格

北韓에서의 說明에 따르면,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들어있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국가·사회제도하에서만 보장될 수”⁶⁾ 있으며, 이러한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制度는 “근로자의 물질·문화적인 복지의 실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옹기 보장하며,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시키는 데 이바지한다”⁷⁾고 한다. 그리고 北韓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⁸⁾

5) 金東漢, “北韓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학교 국문문제연구소, 1988), p. 79.

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科學院 經濟法學研究所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在日朝鮮人科學者協會 社會科學部「門」法政學會 譯(東京: 日本評論社, 1966), p. 175. 이하의 引用에서는 「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라고 略記한다.

7) 上揭書, 같은 단.

8) 여기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라 한 데의 이문과 ‘公民’의 概念은 ‘人民’의 概念과 관련하여 약간 差別을 필요가 있다. 北韓憲法에서는 ‘人民’이라는 말과 ‘公民’이란 말을 混用하고 있다. 北韓의 「정치용어사전」에 의하면 ‘人民’이란 社會發展에 進歩的 役割을 하는 階級들과 階級들을 總하여 가리키는 社會·歷史的 概念이라 하고, ‘公民’이란 ‘인정된 國家의 國籍을 가지고 그 國家의 憲法에 규정된 모든 權利와 義務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면 北韓에서 社會主義制度를 支持·擁護하는 17 살 이상의 全體 男女는 憲法에 의하여 公民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民族反逆者나 反革命分子들은 ‘公民’으로 될 수 없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5, p. 718.

에 관한 制度는 資本主義 國家의 그것과는 결정적으로 相異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⁹⁾

- ① 공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 ②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 ③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그 현실적인 실현이 물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④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 있다.
- 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사회의 융성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며 확대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北韓의 主張은 사실상 하나의 虛構이며, 憲法의 基本權保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기실 基本權規定이란 하나의 프로그램의 假飾의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公民의 權利란 단순히 宣言의 意味밖에 없고, 따라서 公民의 실질적인 權利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餘他 共產主義 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서도 基本權의 性格을 國家內的인 것이며 自然權이 아닌 實定權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國家의 目的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實現이라고 보는 北韓에서 그 社會主義 憲法 아래 진정한 基本權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國家의 基本權保障 義務를 규정한 우리 憲法 第10條와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을 규정한 第37條와 같은 條項이 없는 北韓憲法下에서는 ‘人間의 尊嚴과 價值’가 尊重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基本權 保障이 이루어질 素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北韓憲法은 第49條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基本權 保障의 大前提를 내세우고 있는 바, 이것은 全體主義와 集團主義下에서 個人主義, 人格主義, 反全體主義를 根本理念으로 하고 있는 基本權이 保障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¹⁰⁾

이렇게 볼 때 基本的 人權의 전체가 되는 主基本權으로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值’는 존중될 수 없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 社會主義 憲法상의 基本權이란 실로 名目的 내지 假飾의 意味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基本權에 관

9) 「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p.175~178.

10) Dai-Kwon Choi,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A Critical View of Human Rights Policy," *Seoul Law Journal*, Vol. XX, No. 2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0), p.277 參照.

한 한 北韓憲法은 칸 톨렌슈타인(Karl Loewenstein)의 이른바 '裝飾의 憲法'에 불과하다는 면에서도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¹¹⁾ 실상 멀 페인소드(Merle Fainsod)가 共產主義 國家의 憲法은 "國內外에서 중요한 宣傳役割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¹²⁾고 말하였듯이, 北韓憲法상의 基本權이야말로 國內外에 대한 중요한 宣傳役割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北韓에서의 權利觀念에 대한 것인데, 北韓憲法은 第49條에서 集團主義原則을 내세움으로써 대립된 當事者간에 주장할 수 있는 對立的 概念보다도 國家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可能性概念으로 그 權利概念을 바꾸어 놓았다. 즉, 國家가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權利일 수 있고, 그 權利는 個人이 國家에 대하여 請求, 主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¹³⁾ 이러한 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平等權, 參政權,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와 함께 기타 여러가지 權利들을 北韓憲法에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權利'가 國家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權利'의 侵害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를 救濟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法的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國家權力에 의한 實質的 및 物質的 保障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權利'는 단순한 利益概念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權利'에는 反射의 利益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¹⁴⁾

한편 北韓憲法상의 基本權을 볼 때 항상 그것은 곧 같은 내용의 義務로 바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基本權과는 달리 北韓의 基本權과 義務는 國家權力作用과 平행하는 權利 및 義務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個人, 國家, 社會가 상호간 對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만큼 이 三者는 歷史法則에 따라 같은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에 대항하는 個人的 防禦手段으로서의 人權은 存在할 여지가 없게 된다.¹⁵⁾ 여기서부터 人民의 權利는 곧 義務라는 論理가 나오는

11) Ibid. 參照.

12)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350.

13) 崔建坤, "北韓法에 대한 概說의 研究",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國土統一院, 1978), p. 40.

14) 上揭 報告書, pp. 40~41.

15) Michael Bothe, "The 1968 Constitution of East Germany: A Codification of Marxist-Leninist Ideas on State and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7 (1969), p. 283.

것이다.

2. 基本權 保障의 基礎—集團主義 原則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은 第4章에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 관한 규정을 두고(第49~72條), 그 冒頭에서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 대한 基本原則을 밝히고 있다. 즉, 第49條는 “公民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하여 公民의 權利와 義務의 基礎를 이루는 것이 바로 集團主義 原則임을 闡明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우리나라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 로동계급적 본질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하셨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이 헌법적 규제는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¹⁶⁾

나아가 社會主義 憲法은 第68條에서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생활의 기초이다.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아란 많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이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이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이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교상한 정치·도덕적 의무로 된다.¹⁷⁾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평양: 인민과학사, 1973), pp. 60~61.

17) 上揭書, pp. 80~81.

이렇듯 北韓憲法上 公民의 基本原理과 義務의 基礎를 集團主義原則에 由으로써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그러한 原則에서 逸脫할 수 없다. 즉,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國家作用에 平行하는 權利 및 義務이며, 따라서 權利와 義務는 集團 내지 全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하여 個人의 利益보다 集團과 社會의 利益을 귀중히 여기며 個人의 利益을 社會의 利益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論理가 나오는 것이다.

3. 基本權의 體系와 分類

중래 社會主義의 基本權의 分類에 있어서는 가장 一般的인 方法으로 그 體系를 ① 社會·經濟的 權利와 自由, ② 政治的 權利와 自由, ③ 人格的 (또는 個人的) 權利와 自由로 區分하였다.¹⁸⁾ 그러나 社會主義 憲法上 市民의 基本權의 內容이 充實化·豐富化됨으로써 蘇聯의 憲法書는, ① 社會經濟的 權利와 自由, ② 社會·文化的 權利와 自由, ③ 政治的 權利와 自由, ④ 人格的 (또는 個人的) 權利와 自由로 분류하고 있다.¹⁹⁾

北韓에서는 社會主義의 基本權 分類論에 있어서의 가장 일반적인 方法에 따라 그들 憲法上의 '公民의 基本權利'를 ① 政治的 權利, ② 社會·經濟的 權利, ③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등으로 分類하고 있는데,²⁰⁾ 이에 따라 北韓 憲法上의 基本權利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政治的 權利'로서는, ① 選舉權과 被選舉權(第52條), ② 言論·出版 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第53條), ③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第54條), ④ 申訴와 請願權(第55條)을 들 수 있다.

(2) '社會·經濟的 權利'로서는, ① 勞動에 대한 權利(第56條), ② 休息에 대한 權利(第57條), ③ 無償治療를 받을 權利(第58條), ④ 敎育을 받을 權利(第59條), ⑤ 科學·文學·藝術活動의 自由(第60條)가 포함된다.

(3) '公民의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로서는, ① 人身의 不可侵, ② 住宅의 不可侵, ③ 書信의 秘密保障을 들 수 있다(第64條).

18) Boris Meissner, "Die neue Bundesverfassung der UdSSR,"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Bd. 27, 1978, S. 390; 森下敏男, "社會主義의 基本權의 理論と體系", 社會主義研究會 編, 「現代社會主義憲法論」, 社會主義法研究年報, No. 1 (京都: 法律文化社, 1977), pp. 163~164; 丘秉淵, "北韓·中共 憲法上의 基本的人權", 「北韓法律行政論叢」, 第3輯 (高麗大 法律行政研究所, 1979), p. 11.

19) B.H. 토폴론닌, 「ソビエト憲法論」, 畑中和夫 監譯 (京都: 法律文化社, 1980), pp. 164~165.

20) 「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p. 175ff.

(4) 이 밖에도 北韓憲法에는 公民의 平等權(第51條), 革命烈士 등에 대한 保護(第61條), 男女平等權(第62條), 結婚 및 家庭에 대한 保護(第63條), 海外 '朝鮮公民'에 대한 法的 保護(第65條), 亡命外國人에 대한 庇護(第66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Ⅲ. 北韓의 司法制度와 運營

1. 北韓의 司法機關의 機能

北韓憲法은 第10章에서 裁判所 및 檢察所에 대하여 그 任務를 명백히 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裁判 및 檢察機關에 관한 原則的 規定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武器인 裁判 및 檢察機關의 責任과 그 權限을 높이고 그 機能과 役割을 강화 내지 보장하는데 있다.²¹⁾ 실제로 北韓은 金日成과 金正日 및 黨의 指示를 綱領視하고 그에 따라 反對者에 대한 숙청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裁判 및 檢察機關體系를 재구성하여 그들의 獨裁武器로서 그 機能을 강화하여 왔다.²²⁾ 여기서는 北韓의 司法制度上的 問題點을 지적하고, 알리 라메다(Ali Lameda)의 證言을 통하여 北韓에서의 裁判의 實際를 알아보기로 한다.

2. 北韓의 司法制度上的 問題點

(1) 司法權 獨立의 否定

北韓憲法은 第140條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裁判의 獨立’을 밝힌 이 규정은 그 實效성에 문제가 많다.

첫째, 北韓憲法은 第142條에서 中央裁判所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最高人民會議, 國家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 앞에 責任을 지며, 道(直轄市)裁判所와 人民裁判所는 해당 人民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고 하고 있고, 第103條 3號에서 裁判機關은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하에 裁判事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서 보아 ‘裁判의 獨立’을 밝힌 조항은 유명무실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司法權의 獨立을 排除하는 것을 의미한다.²³⁾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문헌집」(경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01; 丘秉勳, “北韓의 司法·裁判制度”,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183~184.

22) 丘秉勳, 上揭論文, p. 205.

23) 張明奎,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の 「國家機關體系」”, 「法政論叢」, 第5輯(國民大 法學研究所, 1982), p. 113.

둘째, 判事의 獨立性을 侵害할 수 있는 것으로 判事의 짧은 任期가 문제가 된다. 北韓 憲法은 第134條에서 判事의 任期를 該當 人民會議의 任期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中央裁判所 判事와 道(直轄市) 裁判所 判事의 任期는 4년이고, 人民裁判所 判事의 任期는 2년이다. 判事의 짧은 任期는 裁判所 내부의 혼란을 가져와 司法의 獨立性을 확보할 수 없다. 실제의 判事移動現況에 의하면 任期內에 교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²⁴⁾

셋째, 判事 및 人民參審員의 選舉制 및 召選制와 人民參審員의 資質問題이다. 이 選舉制와 召選制의 운영실태를 보면, 勞動黨이 사실상 지명하는 단일후보만이 피선될 수 있고, 또한 勞動黨이 자의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制度의 本旨을 벗어나고 있다.²⁵⁾ 그리고 人民參審員이 判事와 동등한 權限을 갖도록 한 것은 判事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黨性이 강한 中 樞分子를 參審員으로 하여 判事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⁶⁾

넷째, 北韓刑法은 第184條에서 不當한 判決 또는 判定을 한 裁判官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裁判官의 獨立性을 侵害하고 있다. ‘不當한 判決’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黨의 견해와 다른 判決을 내린 判事는 投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⁷⁾

(2) 二審制

北韓은 裁判에서 二審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第1審에서 이미 人民이 직접 참가하여 事件을 정확하게 審理 解釋할 수가 있고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²⁸⁾ 그리하여 第2審은 第1審裁判의 合法性과 正當性에 대한 檢討·審査에 불과하게 된다. 이 때에는 參審員이 參加하지 않는데, 이는 第2審의 審査가 法律理論과 實踐의 專門知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⁹⁾

(3) 裁判의 非公開

北韓憲法은 第138條에서 裁判의 非公開가 可能性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原則은 自由主義 國家의 例外的인 非公開裁判의 概念과는 그 眞意가

24) Asia Watch &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MLIHRC),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December 1988, p. 66.

25) 姜求眞, 「北韓法の 研究」(博英社, 1975), p. 123.

26) 丘秉期, “北韓의 司法·裁判制度”, 前掲論文, p. 205.

27) Asia Watch & MLIHRC, *op. cit.*, p. 67.

28) 丘秉期, “北韓의 司法·裁判制度”, 前掲論文, p. 187.

29) 上掲論文, 같은 면.

다르며, 公正한 裁判의 實現을 手短으로서 惡用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³⁰⁾

(4) 訴訟節次에서의 黨의 統制

北韓에서는 黨이 전반적으로 刑事裁判制度를 統制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社會安全部는 司法制度의 中央機構이며 가장 핵심적인 法の 執行機關으로서 教化施設을 運營한다. 社會安全部에서 逮捕令狀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며 事件의 起訴與否와 裁判에의 회부없이 각 個人의 處罰與否도 결정한다.³¹⁾ 특히 社會安全部는 政治事件인 경우 裁判回附 결정시 當해사건을 國家保衛部에 이첩하여 處罰토록 하고 있어서, 政治犯들은 公正한 節次없이 處刑당하고 있는 것으로 Asia Watch와 MLHRC의 報告書는 밝히고 있다.³²⁾ 아무튼 北韓政權의 維持基盤으로 人民裁判所, 人民檢察所 및 公安機關의 3자가 黨의 統制下에 유기적으로 司法에 관한 共同任務을 수행함으로써 黨의 獨裁道具로서 기능하고 있다.

3. 한 體驗者の 證言을 통해 본 北韓의 裁判

詩人이며 共產黨員이었던 페네주엘라 출신인 알리 라메다(Ali Lamed)의 政治的 拘禁에 대한 證言³³⁾은 北韓의 裁判에 관한 비교적 상세하고 유익한 情報이며 주요한 資料이다.

그는 1966년부터 北韓 外交部가 통괄하는 對外出版部署의 서반어과를 담당하던 중 1967년 9월 체포되어 起訴·裁判없이 1년간 拘禁되었다가 석방되어 가택연금되었다. 그 두 달 후 怠業企圖와 間諜嫌疑로 起訴되어 裁判에 회부되었다.

그때 法廷은 國家保衛部 판관이었고, 裁判所 官吏와는 별도로 中央裁判所의 代表者가 한명 입석했는데 그가 判事와 檢事를 겸임하였다고 그는 말한

30) 上揭論文, p. 189.

31) Asia Watch & MLHRC, *op. cit.*, p. 64.

32) *Ibid.*, 같은 편. 國家保衛部는 1973년 金日成 1人體制 維持를 위한 政治查察을 目的으로 '政務院' 部署인 '社會安全部'의 機能 中 政治保衛部門만을 독립시켜 設置된 機關이다. 이 機關은 '社會安全部'와 같이 金日成 1人獨裁의 직접적인 執行機關으로서 行政體系에 따라 中央으로부터 道(直轄市)·市(區域)·郡은 물론 軍隊組織에까지도 設置되어 있는 政治查察機關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에서는 '國家保衛部'에 대하여 일체 비밀에 붙여 그 活動 및 人的構成의 變動을 밝히지 않고 있다. 「北韓概要」(平和統一研究所, 1986), p. 59.

33) Amnesty International, "Background to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May 1989, pp. 2~4(이하의 引用에서는 BHR in DPRK라고 略記한다); 趙孝濟, "엔비스티가 보는 북한의 人權", 『月刊朝鮮』, 1989. 11月號, pp. 219~220.

다. 그에게는 辯護諮問人이 한명 선임되었고 裁判參觀人은 정복경관 2명과 동역인 1명뿐이었다. 裁判은 기존의 審問內容의 되풀이였고, 自己辯護權은 거부당하고 自白을 강요받았다. 또한 私選辯護人과 法廷의 公開要求는 묵살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의 형식적인 法廷審理로 20년 強制勞役刑을 宣告받았다.

라메다의 이러한 經驗을 통하여 北韓에 있어서의 裁判의 問題點과 人權侵害의 實相의 斷面을 엿볼 수 있다.

IV. 北韓의 刑法 및 刑事訴訟法과 基本權 保障

刑法과 刑事訴訟法은 한나라의 時代的 政治理念과 體制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刑法 및 刑事訴訟法의 研究는 한 시대 한 국가의 政治理念과 體制를 분석하는 일이 되며, 그것은 곧 人權保障의 狀態를 推論하게 된다. 특히 國家權力絕對主義와 個人崇拜主義의 情狀에 있는 北韓의 人權問題에 있어서 北韓의 刑法과 刑事訴訟法을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³⁴⁾ 여기서는 北韓의 폐쇄성으로 인한 資料의 制限이 있지만, 北韓刑法과 刑事訴訟法의 人權侵害規定을 중심으로 그 내용 및 특색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刑法의 人權侵害의 要素

(1) 刑罰法規의 類推適用

北韓刑法은 第9條에서 “범죄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法治國家의 基本原理인 罪刑法定主義를 否定하고 體制維持를 위한 방편으로서 刑罰法規의 類推適用을 刑法適用의 基本原則으로 표명하고 있다.³⁵⁾

34) 朴東熙, “北韓刑法—특히 人權侵害規定을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第4輯, (高麗大 法律行政研究所, 1980), pp. 59~60; 같은 필자, “北韓刑事訴訟法”, 『北韓의 法과 法理論』 (경남대 국문문제연구소, 1988), p. 244.

北韓刑法과 刑事訴訟法은 1976년에 改正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北韓의 비밀고수정 책으로 이것이 公開되지 않고 있다. 國際赦免委員會는 이에 대하여 수차 질의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BHR in DPRK*, p. 1; 趙孝濟, 前掲文, p. 217.

35) 朴光雲, “北韓刑法에 관한 考察”, 『北韓의 法과 法理論』 (경남대 국문문제연구소, 1988), pp. 211~212; 朴東熙, “北韓刑法”, 上掲論文, pp. 63~64.

따라서 刑罰法規의 適用이 社會的 危險性에 기초한 法官의 恣意와 獨斷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構成要件이 존재치 않더라도 刑罰賦課가 가능하게 된다.³⁶⁾ 이는 곧 罪刑法定主義原則을 부정하는 것으로, 政治·社會的 判斷에 따라 罪라고 인정되는 한 民事的 또는 道德的 問題이건 處罰할 수 있다는 人權蹂躪의 宣言인 것이다.³⁷⁾

비록 北韓의 刑法學者 심현상도 刑法 第9條의 문제를 인식하여, 犯罪의 主體에 관해서는 類推適用은 許用될 수 없다³⁸⁾고 하고, 第9條는 엄격한 解釋과 適用이 있어야 한다³⁹⁾고 주장한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適用例에 의하면 이는 虛構의이며, 實務의 次元에서 解釋의 엄격성의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⁴⁰⁾

(2) 刑罰週及適用의 認定

北韓刑法은 第5條에서 “죄를 범한자는 그의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고 刑罰不遡及의 原則을 규정하고, 第6條에서 “어떤행위에 대한 형법적용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경하게 하는 법령은 그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하여 刑罰不遡及의 例外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刑罰法規의 不遡及原則을 北韓刑法學者 심현상은, 北韓刑法上 解釋上的 原則이고 立法上的 原則이 아니기 때문에 立法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그 例外를 設定할 수 있다고 한다.⁴¹⁾ 실제로 北韓刑法의 內容속에서 刑罰의 遡及效가 인정되고 있다. 즉, 北韓刑法은 第17條에서 “8·15 해방 이전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성질이 북한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는 그것은 범죄로서 형사소추 할 수 없다”고 경과조치적 규정을 하고, 第60條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행위에 대한 시효의 적용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刑事訴追時效를 인정하지 않고 刑罰權發動의 基準까지도 法官의 恣意에 委任하는 것이다. 따라서 刑罰不遡及의 例外立法과 함께 刑法 第17條, 第60條를 類推解釋의 適用과 잘 관련하여 이용하면 이른바 ‘반국가적범죄’에 관한 한

36) 朴光燮, 上揭論文, p. 213.

37) 朴東熙, “北韓刑法”, 前揭論文, p. 64.

38)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총칙」, 《경양: 국립출판사, 1957》, p. 78; 朴東熙, 上揭論文, p. 65.

39) 심현상, 上揭書, 같은 편; 朴光燮, 前揭論文, p. 213.

40) 朴東熙, 前揭論文, pp. 64~65; 朴光燮, 上揭論文, p. 213.

41) 심현상, 前揭書, p. 83; 朴光燮, 上揭論文, p. 214.

刑罰의 適及效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⁴²⁾

(3) 社會的 危險性의 強調

‘社會的 危險性’은 北韓 刑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犯罪의 社會的 屬性의 실질적 표징이다.⁴³⁾ 이는 體制挑戰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종적인 判斷基準이 되는 包括的 概念이기도 하다.⁴⁴⁾ 北韓刑法은 第7條에서 “죄라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第8條에서 “본법 자칙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社會的 危險性이란 構成要件을 초월한 超法規的 强制의 道具로서 犯罪認定의 無制限의 무기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概念이 된다.⁴⁵⁾

물론 北韓의 犯罪論의 構造가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北韓刑法 第8條의 내용에서 社會的 危險性이라는 기준은 犯罪成立을 阻却하는 消極的 意味規定이 아닌, 北韓의 政治體制上 體制反對勢力에 대한 무제한의 刑事處罰의 根據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⁴⁶⁾

(4) 未遂·豫備·過失 및 共犯의 處罰

北韓 刑法은 第20條에서 “범죄의 미수 및 예비는 기수와 동일한 조항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여 既遂, 未遂 및 豫備 등의 刑法的 同一價値를 선언하고 있다. 過失犯에 관하여는 北韓 刑法에서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한 처벌한다”는 우리 刑法에서와 같은 明文規定의 不存在로 해서 法官의 恣意性을 排除하기 어려운 司法制度下에서 政治的 便宜 또는 法官의 恣意的인 判斷에 의존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北韓刑法 第24條에서 “정범자, 교사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正犯, 教唆犯

42) 崔達坤, 前掲 報告書, p.73; 姜求眞, 前掲書, p.184.

43) 심현상, 前掲書, p.111.

44) 朴光雲, 前掲論文, p.215.

45) 上掲論文, 같은 면.

46) 上掲論文, p.216. 이 점에 대하여 裴鍾大교수는 北韓刑法의 ‘社會的 危險性’의 批判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犯罪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하는 形式的 犯罪概念에 바탕한다고 지적하면서, 北韓 刑法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形式的 犯罪概念과 實質的 犯罪概念의 융합시도는 만일 성공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임을 피력하고, 문제의 관건은 사회적 위험성의 내용에 달려 있다고 한다. 裴鍾大,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北韓法律行政論叢』, 第7輯(高麗大 法學研究所, 1989), pp.45~48.

및 從犯의 同一刑法的 價値를 宣言한 것이다. 이와 같은 刑法上 處罰規定은 罪人은 罪人이라는 無差別人權侵害思想의 발로라 할 것이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한 論者는 北韓刑法에 대해 우리에게 비하여 ‘실로 유예가 없는 가공할 刑法’으로 표현하여 그 가혹성을 지적하고 있다.⁴⁸⁾

(5) 不申告의 犯罪化와 連坐制

北韓 刑法은 第26條에서 犯罪의 不申告에 대한 犯罪性에 관한 原則을 규정하고, 同 第70條에서 “외국으로 탈주하는 군무자의 가족으로서 그 탈주를 협조하였거나 국가기관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전부의 재산물수에 처한다”고 하고,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 중 그외의 동거 성년가족에 대하여는 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여 不申告의 犯罪性과 連坐刑罰을 制度化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서 政治體制維持目的으로 自己外的 他人의 行爲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부과하는 北韓 刑法의 前近代性을 볼 수 있다.⁴⁹⁾

2. 北韓 刑事訴訟法の 人權侵害의 要素

(1) 北韓 刑事訴訟法の 人權否定的 規定

北韓의 刑事訴訟法은 金日成敎示와 그 具現인 黨의 政策을 표현한 것이며 北韓의 政治制度를 보유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본다.⁵⁰⁾ 즉, 北韓의 體制守護를 위한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刑事訴訟法은 작용한다. 北韓의 刑事訴訟法은 彈劾主義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바로 人權尊重의 刑訴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彈劾主義下에서도 糾問主義의 人權否定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北韓의 刑訴法上 被告의 地位를 통하여 살펴본다.

첫째, 審問調書閱覽 및 訂正權(第111條)은 罪를 是認 내지 自白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는때, 裁判官이 訂正要求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法的 措置도 없기 때문에 그 實效性이 무시될 수 있다.

47) 朴東熙, “北韓刑法”, 前掲論文, p. 63.

48) 嚴正堧, “北韓刑法의 構造와 問題點”, 「刑法研究」, 第1卷(法典出版社, 1980), p. 194. 이점에 대한 論議와 批判은 襄鍾大, 前掲論文, pp. 48~50 參照.

49) 朴光璧, 前掲論文, p. 217.

50) 「법학사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71), p. 719; 金日秀, “南北韓 刑事訴訟法の 比較研究”, 「北韓法律行政論叢」, 第7輯(高麗大學學研究所, 1989), p. 180.

둘째, 豫審狀에 대한 抗告權(第161條)도 豫審員이 이 抗告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만 檢事에게 알리던 被告는 가혹한 處罰을 기다리는 결과가 된다.

셋째, 證據物의 檢證 및 書類閱覽申請權(第207條)도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法的 對抗措置가 없다. 이것은 刑事訴訟法上의 人權尊重의 核心인 防禦權이 구체화되어 있지않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기인한다.⁵¹⁾

더욱이 自白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당연히 自白은 證據가 되며, 被告의 無罪推定의 基本原則은 인정되지 않으며, 證據蒐集에 있어서는 被告의 參與權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拷問에 의해 證據蒐集조차도 合法的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⁵²⁾ 결국 被告의 訴訟上의 權利가 확보되지 않아 人權蹂躪의 가능성은 큰 것이다.

(2) 北韓 刑事訴訟 節次上 人權侵害의 要素

北韓 刑事訴訟法은 段階의 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構造를 보면 ① 節次開始, ② 搜查, ③ 豫審, ④ 裁判所에의 送付, ⑤ 公判前 手續, ⑥ 公判, ⑦ 上訴審, ⑧ 判決執行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한 人權侵害의 要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搜查機關要員의 判斷에 따라 ‘嫌疑者’의 與否가 가려지는데, 그 基準設定(刑訴法 第82條)이 모호하고, 혐의자에 있어서 搜查過程 중 防禦權은 전무한 상태이다.⁵³⁾

둘째, 人身拘束의 決定은 司法府의 權限임이 원칙이나 檢察에서 逮捕權을 행사하고 있다.⁵⁴⁾

셋째, 政治犯罪嫌疑者에 대한 체포송인절차는 例外規定을 든다고 하였으나, 그 特別規定의 具體의 事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넷째, 審問方法은 ‘자백은 관대하게, 반항은 가혹의 원칙’에 따라 自白強要의 原則이 우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⁵⁵⁾

다섯째, 公判은 公開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나, 重要政治의 事件들이 非公開로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⁵⁶⁾

51) 朴東熙, “北韓刑事訴訟法”, 前揭論文, pp. 253~254.

52) 上揭論文, p. 254.

53) 上揭論文, p. 256; 姜求眞, 前揭書, p. 247.

54) 上揭論文, pp. 256~257.

55) 上揭論文, p. 259.

56) 朴憲永事件이 代表的인 例. 上揭論文, p. 260.

여섯째, 北韓 刑事訴訟法 第241條에 의하면 단 한번의 上訴審판을 인정하는데, 政治犯의 경우는 그나마 단 한번의 上訴機會마저 박탈당하고 있다.⁵⁷⁾

V. 北韓의 人權狀況

1. 北韓에 있어서의 人權現況

美國務부의 1988 년 人權報告書에 관해 설명한 美國務部 人權擔當 次官補 리처드 쉬프터(Richard Schifter)는 北韓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年’에 나오는 공포국가에 가장 가까운 곳이며 그 政府는 國民을 자동기계화하려 하고 있다.”⁵⁸⁾고 밝혔다. ‘아시아人權調查機構’(Asia Watch)와 ‘미네소타 辯護士 國際人權委員會’(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MLIHRC)의 報告書는, “北韓政府는 계속해서 그들 住民의 基本의 人權과 自由를 박탈하기 위한 包括的인 制度를 설정하여 왔다. 그들은 국경과 주민들의 주변에 공포의 벽을 구축함으로써 이 制度를 유지하였고 住民들이 그들의 權利를 認識하거나 國家的으로 또는 國際的으로 이러한 權利를 주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만들었다.”⁵⁹⁾고 기술하고 있다. ‘國際赦免委員會’(Amnesty International)는 ‘北韓人權問題의 背景’(Background to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소책자에서 관리들의 閉鎖性과 國家統制言論 때문에 人權에 관한 情報을 입수하기가 극히 곤란한 나라의 하나로 北韓을 꼽고 있고, 자유로운 情報을 北韓內로 유입시키는 것 또한 至難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⁶⁰⁾ 그리고 美國務부의 人權報告書는, 北韓은 1989 년에도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人權保障조차도 계속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⁶¹⁾

여러튼 北韓은 情報의 철저한 統制로 人權實狀의 신뢰할만한 情報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北韓을 ‘東北아시아의 고립된 수수께끼의 나라’⁶²⁾

57) 上揭論文, pp. 263~284.

58) 『東亞日報』, 1989年 2月 9日, p. 4.

59) Asia Watch & MLIHRC, *op. cit.*, p. vi.

60) 趙孝濟, 前揭文, p. 216.

61) USIS (U.S. Embassy, Seoul, Korea), *BACKGROUND* (February 22, 1990), 美國務부의 1989 Human Rights Report 중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部分, p. 1; 『朝鮮日報』, 1990年 2月 22日, p. 4.

62) Jon Halliday, “The North Korean Enigma,” *New Left Review*, No. 127(May-June 1981), p. 18.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ia Watch, MLIHRC, Amnesty International 과 같은 國際的 人權擁護團體들의 노력은 北韓人權實狀에의 接近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北韓 海外留學生들의 亡命은, 그들이 北韓體制에서도 ‘토대’가 좋은 엘리트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自由社會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北韓社會全般에 걸쳐있음을 짐작케 한다.

여러 資料를 통해 볼 때 北韓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人權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基本權의 保障에 대한 制度나 實際에 있어서도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속자는 北韓에는 ‘人權’이라는 概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⁶³⁾

2. 北韓의 國際人權規約加入과 그 履行實狀

北韓은 1981년 9월 14일에 國際人權規約(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중 A規約(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B規約(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에 加入하였다. 다만 B規約 第41條(當事國의 義務履行에 관한 紛爭에 대한 人權委員會의 審理權限)와 B規約에 대한 選擇議定書의 加入은 留保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1949년의 ‘戰爭犠牲者保護를 위한 제네바協定’(Geneva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War)과 ‘戰爭犯罪과 人類에 관한 犯罪의 法的 制限의 非適用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北韓은 批准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 國際人權機構 및 條約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⁶⁵⁾

人權問題의 國際化는 國內에 留保되었던 人權問題를 國際的 關心事로 전환시켜서 UN 및 權限있는 國際機關이 이를 國際的 次元에서 다룰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國際人權規約은 人權保護體系의 根幹으로서 同規約의 當事國에 대하여 義務를 부과하며, 그 範圍內에서 國家主權原則이 제한받는 法的 拘束力을 갖는다.⁶⁶⁾

63) 佐藤勝巳, “金日成主義下에서의 人間의 權利”, ‘北韓社會의 人權’에 관한 韓國自由總聯盟 國際學術 심포지움 發表文(1989.11.14), p.5.

64) 崔鍾武, “國際人權規約 加入問題”, 『國際法學會論叢』, 第34卷 2號 (大韓國際法學會, 1989), p.289.

65) Asia Watch & MLIHRC, *op. cit.*, p.24.

66) 許方彬, “國際人權規約 加入에 따른 問題點 檢討”, ‘國際人權規約加入과 그 施行上の 問題

하지만 北韓의 國際人權規約 加入에 대하여는 北韓 人權狀況에 비추어 이
는 대외적인 宣傳手段일 뿐이라는 懷疑論이 충분한 理由와 根據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法規範과 法現實의 乖離를 별문제로 하고 北韓의 國際人權規
約加入만을 두고 볼 때, 두 規約상의 義務를 北韓이 履行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⁷⁾ 어쨌든 北韓의 人權侵害事例에 대
한 國際 및 非政府機構의 調査에 대한 태도는 극히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1989년 平壤에서 개최된 世界青年學生祝典 개막식 때의 ‘앰네스
티는 어디에’ (WHERE IS AMNESTY?)라는 플래카드 소동 이후 國際赦免
委員會의 北韓訪問이 不可能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⁶⁸⁾

3. 北韓 憲法상의 基本權 規定과 그 實態

(1) 公民의 政治的 權利

1) 選舉權과 被選舉權

北韓憲法은 第52條에서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
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
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 憲法이 選舉權과 被
選舉權 보장을 세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資本主義社會에서의 근로자
들이 각종 制限措置로 選舉에서 제외되고 國家政治活動에 전혀 참가하지 못
하고 있다⁶⁹⁾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北韓에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保障을
하고 있다는 宣言의 意味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⁷⁰⁾ 그리고 選舉權과
被選舉權의 年齡을 동시에 17세로 하고 있음은 自由民主主義國家의 憲法이
대부분 選舉權과 被選舉權의 年齡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하여 특이하며,
年齡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은 選舉制度에 있어 그 特色이라 할 수 있는 候補者 推薦制度를 채택
하여 모든 選舉에서 單一候補制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公民의 選
舉權과 被選舉權은 실질적인 制限을 받아 왔다. 北韓의 候補者 推薦制度란
單一選舉區에 單一候補者만을 추천하되, 실은 勞動黨이 내세운 特定인이

點'에 관한 韓國法學院 세미나 發表文(1988. 10. 28), p. 7.

67) 張孝相, “國際人權規約와 南北韓關係”, 『人權과 國際法』, 張岩 張載浚博士華甲記念(博英社, 1989), pp. 1~2.

68) 趙幸濟, 前揭文, pp. 222~223.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前掲), p. 67.

70) 金東漢, 前掲論文, p. 86.

‘代議員 候補者 推薦會議’의 추천절차를 거쳐 候補者로 추천되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에서는 사실상 勞動黨과 金日成에 忠誠을 바치는 熱誠分子만이 代議員候補者의 指名을 받도록 되어 있다.⁷¹⁾

이러한 候補者 推薦制度는 選舉過程의 力點을 候補者에 대한 指名의 단계에 두는 것이며, 選舉運動이란 그 ‘宣傳煽動’이고 投票란 이미 내려진 決定에 대한 形式的 確認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北韓에서의 選舉는 순수한 선거라기 보다는 複數選擇肢의 存立을 허용치 않는 一黨獨裁에 대한 信任投票의 方策에 불과한 것이다.⁷²⁾

2)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

北韓 憲法은 第53條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表現의 自由가 黨의 領導와 國家의 統制下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됨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團結을 강화하여 黨과 首領의 주위에 온전히 묶여 세우는데 전적으로 복무한다고 주장한다.⁷³⁾

北韓 憲法上 言論·出版의 自由 규정과 北韓 刑法과는 矛盾現象을 드러내고 있다. 즉, 北韓 刑法 第99條와 第100條는 政府에 대한 批判을 制裁하기 위하여 政府에 광범위한 自由裁量權을 부여하고 있음을 Asia Watch와 MLHRC의 報告書는 지적하고 있다.⁷⁴⁾ 실제로 歸順者의 證言에 의하면, 가정용라디오는 政府傘下 放送만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外國放送을 차단하기 위하여 有線放送體制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⁷⁵⁾

北韓의 主要言論機關들은 國家統制下에 놓이고, 外國言論媒體는 차단되어 있으며, 國內言論媒體에는 檢閲이 시행되고 있어 北韓政府의 公式路線으로부터 어떠한 離脫도 용납되지 않는다.⁷⁶⁾ 또한 北韓의 宣傳活動에 대한 批判은 逆行行爲로 간주된다. 실제로 건설한 바 있는 알리 라메다가 北韓의 宣傳內容의 신뢰문제를 제기하여 外國消費者의 기호에 맞도록 修正하는 것이

71) 金奉柱, “北韓의 選舉制度”, 「國際問題」, 1973. 4月號, p.59.

72)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p.43.

73) 「정치용어사전」(前掲), p.689; 「정치사전」(경향: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307; 金東漢, 前掲論文, p.87.

74) Asia Watch & MLHRC, *op. cit.*, pp.109~110.

75) *Ibid.*, pp.110~111; “平壤주제 외교관·亡命학생이 말하는 폐쇄현상”, 「朝鮮日報」, 1990年 1月 19日, p.4.

76) USIS, *op. cit.*, pp.4~5.

좋겠다는 意見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外國人間諜罪로 6년 이상 獨房에 감금되었던 경우를 들 수 있다.⁷⁷⁾ 아울러 國際赦免委員會의 1989년 人權報告書(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89)에 의하면, 1988년 6월과 7월 平壤의 金策工科大学와 平壤大學 構內에서 政府의 經濟政策을 비난하는 大字報와 관련하여 敎授와 學生 40여명이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⁷⁸⁾

그리고 北韓 憲法에서는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지만, 北韓刑法에서는 이들 自由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北韓에서는 이들 自由가 허용될 여지가 없다. 歸順者의 證言은, 세명 이상의 非認可모임은 不法團體로 看做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⁷⁹⁾

北韓에서는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⁸⁰⁾이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⁸¹⁾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계급성을 초월한 당이란 없다고 한다.⁸²⁾ 그러므로 北韓에서는 勞動階級과 勤勞人民의 利益의 代表者인 朝鮮勞動黨만이 유일하게 正當性과 正統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北韓은 多黨制國家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조선사회민주당’과 ‘친도교청우당’을 인정하여 憲法上 民主主義的 政黨의 자유로운 活動條件保障(第53條 2項)에 상응하려는 듯한 友黨政策을 펴고 있다.⁸³⁾

3)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

北韓憲法는 第54條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앙의 자유’라고 할 때 ‘신앙’이란 개념을 ‘종교’라는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信仰의 자유와 함께 反宗教宣傳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은 自由의 概念自體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北韓刑法 第258條에서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하여 宗教的 指導者가 될 수

77) Asia Watch & MLHRC, *op. cit.*, p. 116.

78)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89 중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부분 pp. 181~182; 「朝鮮日報」, 1989년 10월 2일, p. 2.

79) Asia Watch & MLHRC, *op. cit.*, p. 118.

80) 「김일성저작선집」, 제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100~101; 金東漢, 前掲論文, p. 88.

81) 上掲 선집, 제 2권, p. 245; 上掲論文, 같은 편.

82) 「김일성저작선집」(前掲), p. 144; 「정치사건」(前掲), p. 252.

83) USIS, *op. cit.*, pp. 6~7.

있는 權利를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있다.⁸⁴⁾

마르크스가 '宗教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까지 宗教를 부정한 상황의 맥락에서 社會主義憲法 등이 규정하는 宗教·信仰의 自由란 裝飾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⁸⁵⁾ 北韓의 宗教의 自由에 관하여 美國務部의 1989년 人權報告書는 北韓이 宣傳目的으로 政府가 후원하는 宗教團體를 活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⁸⁶⁾ 즉, 1988년 건립된 2개의 教會는 外國人 訪問對象地가 되었고,⁸⁷⁾ 이들 교회와 예배의 眞實性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見解가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金日成과 그의 집안에 대한 崇拜 및 主體思想이 北韓에서 완전한 機能을 발휘하는 유일한 宗教임을 지적하고 있다.⁸⁸⁾

4) 申訴와 請願權

北韓 憲法는 第55條에서 申訴權과 請願權을 규정하고 있다. 申訴란 公民들이 社會적으로 正當한 要求나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個別的 個人들의 事業上 부족한 점과 관련하여 該當 機關, 團體에 제기하는 의견을 말한다. 請願은 國家機關, 企業所, 協同團體, 政務院들의 事業을 改善發展시키기 위하여 公民이 제기하는 창발적인 意見を 말한다.⁸⁹⁾ 請願은 國家機關, 社會團體 등에 대한 意思提示制度인 반면 申訴는 非法의 行爲에 의하여 침해된 權利와 利益의 回復을 요구한다는 점과 個人的 要求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⁹⁰⁾ 請願의 解決原則과 그 節次는 申訴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우리 나라의 請願制度는 北韓의 申訴制度和 請願制度를 모두 포함하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⁹¹⁾ 그러나 北韓에서 이러한 制度가 實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 公民의 社會·經濟的 權利

1) 勞動에 대한 權利

北韓 憲法는 第56條에서 勞動에 대한 權利를 규정하고 있다. 社會主義 國

84) 宗教活動에 參與한 者는 糧穀配給이 삭감되거나 食糧로 추방되기도 한다. 宗教指導者는 教化所에 收容되기도 한다. Asia Watch & MLIHRC, *op. cit.*, pp. 101~102.

85) 金東漢, 前揭論文, p. 89.

86) 北韓은 沒개의 死傷을 보존하여 觀光이나 展示用으로 活用하고 있다. 北韓에 亡命한 시아 누크공이 佛教徒이므로 北韓當局은 合명의 證거를 새로이 교육시켜 급조한 死傷에서 시아 누크의 死傷을 도왔다는 보고가 있다. Asia Watch & MLIHRC, *op. cit.*, p. 102.

87) USIS, *op. cit.*, p. 5; 「南北韓社會文化 現況比較」(國土統一院, 1989), p. 120. 여거서의 2개의 教會는 長壽성당(7월 建立)과 봉수교회(11월 첫 주일에 入堂禮拜)이다.

88) USIS, *ibid.*

89) 「정치·용어사전」(前揭), p. 391.

90) 上揭사건, 같은 면; 金東漢, 前揭論文, p. 91.

91) 上揭論文, 같은 면.

家에서 가장 중심적인 테제가 勞動이라 할 때 勞動者優位論의 立場에서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도급인사를 제외하고는 최소의 賃金과 제한된 食糧을 위해 매일 장시간의 勞動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北韓 實情에서 住民들은 政府許可없이 職場을 옮길 수 없으며, 독립된 勞動組合의 設立은 禁止되어 있다.

北韓에 있어서 勞動組合의 機能은 勞動者들의 할당생산량을 달성하고 政府의 理念을 敎化시키는데 있고, 그 任務는 黨의 命令을 完遂하는 차당역할이다.⁹²⁾ 美國務部の 1989년 人權報告書에 의하면, 北韓에는 自由勞組가 존재하지 않으며, 理論上 黨이 勞動者들의 利益을 대표하기 때문에 勞組는 形式뿐이라고 한다. 또한 勞組는 罷業權이 없으며 勞動者들은 團結權 및 團體交涉權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強制勞動의 禁止 등에 대한 어떠한資料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⁹³⁾

2) 休息에 대한 權利

北韓 憲法은 第57條에서 休息에 대한 權利를 규정하고, 이 休息權은 8시간 勞動制, 有給休假制, 國家費用에 의한 靜休養制, 文化施設擴充 등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하루 8시간 勞動制에 대하여 보면, 실제로 北韓住民의 하루 平均勞動時間은 義務의 政治集會와 運動行事를 포함하여 9~12시간이며, 軍人은 약 16시간이 된다고 한다.⁹⁴⁾ 北韓當局의 선전은 이를 勞動者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愛國의 勞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8시간 勞動制가 名目에 그치고 있음을 볼 때 休息權은 실현이 不可能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⁹⁵⁾

3) 無償治療를 받을 權利

北韓 憲法은 第58條에서 無償治療를 받을 權利를 규정하고 있으나, 北韓社會가 階層別로 分類되어 醫療奉仕에 있어서도 그 職位에 따라享有될 수 있기 때문에 無償治療權의 주장은 호도된 것이다. 北韓에서의 醫療行爲는 集團 위주로 실시되고, 그 目的을 治療보다는 作業에 필요한 健康狀態만 유지시키는데 두고 있을 정도로 醫療環境은 열악하다.⁹⁶⁾ 물론 北韓이 자랑하

92) Asia Watch & MLIHRC, *op. cit.*, p.133.

93) USIS, *op. cit.*, p.8.

94) *Ibid.*

95) 金東漢, 前掲論文, pp.92~93.

96) Asia Watch & MLIHRC, *op. cit.*, pp.144~145.

는 13층 건물의 平壤産院도 展示用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訪問者의 傳言에 의하면, 診療權은 黨員用(빨강색), 一般用(파랑색)으로 나뉘져 빨강색 소지자는 診療의 優先權이 부여된다.⁹⁷⁾ 歸順者의 證言에서, 勞動者는 入院期間 중 20~40%의 賃金이 삭감되고, 外製藥의 暗市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⁸⁾ 이런 현실에서 北韓에서의 선진적인 社會保障이 이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4) 敎育을 받을 權利

北韓 憲法은 第59條에서 敎育을 받을 權利를 규정하여, 11年制義務敎育 실시로 선진적인 敎育制度의 施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北韓에서의 敎育은 金日成唯一思想 注入을 위한 道具에 불과하다. 北韓의 敎育은 政治的 社會的 階層에 따라 差別됨으로써 그 平等性を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學校는 平壤과 大都市에 집중되고 엘리트階層의 學生들만이 上級學校에 진학하고 있음을 歸順者들은 말하고 있다.⁹⁹⁾ 물론 北韓에서의 敎育은 金日成崇拜에 대한 敎育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敎科課程은 戰爭意識 교취에 할애되고 있다.¹⁰⁰⁾

5) 科學과 文學·藝術活動의 自由

北韓 憲法은 第60條에서 科學과 文學·藝術 活動의 自由를 규정하고 있는데, 第3章의 文化條項과 연계시켜 볼 때, 이러한 文化權은 중요한 權利로 인정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韓文化의 두드러진 모습은 藝術과 科學의 創作을 모두가 金日成, 金正日 또는 그들의 영감과 지도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集團主義 原則에 의하여 모든 文學作品은 金日成 父子, 政府, 黨 또는 地方藝術團體의 이름으로 出品된다.¹⁰¹⁾ 專門學者와 歸順者에 의하여 확인된 바로는, '4·5 창작단'이라는 著作者들에 의해 金日成과 金正일에 관한 방대한 文學作品이 제작되고, 勞動黨의 '역사·리론 연구회'는 金日成 一家歷史를 집필하고 個人偶像化를 발전시킨다. 만약 극소수부분에서라도 黨의 指針에 作品이 어긋난다면 해당자는 추방되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¹⁰²⁾

97) *Ibid.*, p.145.

98) *Ibid.*, pp.144~146.

99) "北韓유학생 전철우군 歸順手記", 「서울신문」, 1989年 12月 27日, p.12.

100) Asia Watch & MLHRC, *op. cit.*, pp.147~148.

101) *Ibid.*, p.151.

102) *Ibid.*, p.153.

(3) 公民의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1) 人身의 不可侵

北韓 憲法는 第64條에서 人身과 住宅의 不可侵 그리고 書信의 秘密保障을 하나의 條文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憲法規範은 그 現實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음의 고찰에서 알 수가 있다.

가. 政治的 拘禁

金日成과 金正日 父子의 敎示인 '유일사상 10 대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곧 '反黨行爲'로 규정되고, 이는 곧 死刑이나 收容所行을 의미하게 된다.¹⁰³⁾ 國際赦免委員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反體制容疑者들이 裁判없이 또는 形式的 裁判으로 集團勞動收容所에서 長期拘禁된다고 한다. 더욱이 社會的 輕犯罪者라도 추방 또는 투옥 등의 處罰을 받을 수 있는 政治的 犯罪로 간주된다는 것이다.¹⁰⁴⁾ 個人의 逮捕와 拘禁에 관한 情報은 外國人이나 間諜嫌疑者가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北韓當局과 言論媒體에 의해 밝혀진다. 그 예로 알리 라메다의 경우와 北韓의 民衆구하사의 日本亡命에 따른 두명의 日本선원에 대한 拘禁을 들 수 있다.¹⁰⁵⁾

나. 政治犯集團收容所

北韓에서는 金日成政權의 體制維持를 위해서 反對勢力의 除去手段과 父子 權力世襲體制的 強化에서 政治犯集團收容所의 存在理由를 찾을 수 있다. 住民의 出身成分에 따른 分類, 특히 思想檢閲로 '反黨分子'로 분류된 政治犯은 1黨獨裁體制的 維持를 위해서 擴大再生産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써 전체 北韓住民의 27%가 '敵對階層'으로 분류되고 있다.¹⁰⁶⁾

103) *Ibid.*, pp. 105~107; 『中央日報』, 1989年 1月 18日, p. 13.

1974년 2월 北韓 로동당중앙위원회는, 金正일이 제안했다고 하는 이른바 '당유일사상과 혁명사상의 10대원칙'을 채택하였다. '10대원칙'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金日成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② 金日成을 충성으로 높이 무르려 모셔야 한다. ③ 金日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④ 金日成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⑤ 金日成의 교시집행에서 두조전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金日成을 충성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金日成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⑧ 金日成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金日成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⑨ 金日成의 유일지도도면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⑩ 金日成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北韓總覽』(北韓研究所, 1983), pp. 172~179.

104) *BHR in DPRK*, p. 2; 趙孝濟, 前掲文, p. 218.

105) *Ibid.*, pp. 2~3; 上掲文, pp. 218~219.

106) 『中央日報』, 1989年 1月 18日, p. 13.

北韓은 기존의 ‘敎化所’, ‘49號 補養所’, ‘勞動敎養所’ 외에 ‘69號 勞動敎化所’, ‘少年敎養所’, ‘10號 違反者集結所’ 등이 있어 자기 犯法者들을 수용하고 강제노동시키고 있다. 또한 北韓은 이와는 별도로 政治犯集團收容所를 설치하고 있다.¹⁰⁷⁾ 北韓은 政治犯收容所의 설치·운영의 사실을 숨기고 있으나 ‘실수로 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센터’의 存在를 시인하고 있다.¹⁰⁸⁾

Asia Watch와 MLIHRC의 報告書에 의하면, 北韓에는 12개의 政治犯收容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4개는 金正日의 反對派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생긴 6,000명 내지 15,000명을 위해 1982년에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¹⁰⁹⁾ 報道에 따르면, 韓國의 情報當局도 北韓의 政治犯收容所의 存在를 그 具體的 實狀과 함께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험준한 山岳地帶의 계곡이나 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政治犯收容所는 收容能力이 5,000명에서 27,000까지이고, 수용인원이 1982년에 105,000명에서 현재는 152,000여명으로 추산되어 50%정도 늘어났음을 밝히고 있다.¹¹⁰⁾

이런 收容所에서의 人權實態를 보면, 수용된 政治犯은 모든 基本權이 박탈된 채 하루 12시간의 強制勞役을 하고, 최소한의 生必品 이외에는 모든 것을 自給自足하여야 하며, 赦免이나 減刑의 기회도 없이 사실상 終身刑을 살고 있다.¹¹¹⁾

다. 死刑制度

Asia Watch와 MLIHRC의 報告書는 北韓刑法의 약 47個條項이 死刑을 宣告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중 단순히 犯罪行爲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死刑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¹¹²⁾

北韓은 실제로 人民裁判을 통하여 政治的·反社會的 犯罪者들을 公開處刑 하였으며, 특히 政治犯收容所에서의 正當한 節次없는 死刑執行은 人權을 말살하는 것이다.¹¹³⁾

2) 住宅의 不可侵과 書信의 秘密保障

北韓 憲法은 居住 및 旅行의 自由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北韓에서는 職

107) 「南北韓比較叢書」(國土統一院, 1988), p. 26.

108) USIS, *op. cit.*, p. 3.

109) Asia Watch & MLIHRC, *op. cit.*, p. 74.

110) 「東亞日報」, 1990年 1月 18日, p. 2, p. 12; 「中央日報」, 1990年 1月 18日, p. 13.

111) 上揭 李 新聞, 모두 같은 日.

112) Asia Watch & MLIHRC, *op. cit.*, pp. 83~89.

113) *Ibid.*, p. 90, pp. 93~94.

場配置와 住宅配定制度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住民은 集團住居地域 內에서 산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국적으로 保安機關의 情報網에 의하여 住宅의 不可侵의 權利가 침해받고 있다. 그 주된 수단이 도청장지이다. 이것에 의해 金日成을 비난한 科學者가 處刑된 적도 있고, 이를 피하여 귀순한 사람도 있다.¹¹⁴⁾

(4) 其他의 權利

1) 平等權

北韓 憲法은 第51條에서 公民의 平等權을 규정하고 있으나,北韓은 엄격한 制度를 통해 住民에게 不平等한 權利와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北韓에서는 住民을 核心階層, 動搖階層 및 敵對階層의 3階層으로 分類하고, 이 계층에 따라 裁判制度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糧穀의 配給에 差異를 두고 있다. 또한 歸順者들의 證言에 의하면, 北送僑胞의 實狀을 “우리는 숨은 쉬고 있으나 시체와 같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경멸적인 대접을 짐작하게 한다.¹¹⁵⁾

北韓은 또한 身體障礙者들에게 平壤市內通行은 물론 居住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Asia Watch와 MLHRC의 보고는 2~3년마다 不具者, 老人, 未亡人 및 病者들을 시골로 強制移住시키고 난장아들이 벽지로 추방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¹¹⁶⁾北韓은 平壤을 理想的인 都市概念으로 건설되었다고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人權彈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 革命鬪士 등에 대한 特別保護

北韓 憲法은 第61條에서 革命鬪士 등에 대한 國家와 社會의 特別保護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北韓 社會主義 憲法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며, 黨과 國家의 시종일관한 革命的 立場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公民이 革命的 승리를 위해 용기백배하여 鬪爭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目的이 있다고 한다.¹¹⁷⁾

3) 男女平等權

北韓 憲法은 第62條에서 男女平等權을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女性의 社會의 地位向上과 權利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男女의 平等한 權利를 인

114) Ibid., pp. 84~85.

115) Ibid., pp. 27~35 參照.

116) Ibid., pp. 35~38, pp. 43~44 參照.

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前掲), p. 74.

정함으로써 社會政治生活와 社會主義建設에서 女性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¹⁸⁾ 北韓은 이미 1946년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을 제정하여 男女平等의 실현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女性의 政治的 地位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家事業務에도 별 變化가 없었다.¹¹⁹⁾

北韓에서는 男性이 軍에 服務하는 16세부터 30세까지의 民間勞動力의 90%를 女性이 차지하고 있다. 北韓女性은 國家에 대한 奉仕期間이 약 14년에 이르지만 몇몇 職場을 제외하고는 最上位職에 오를 수 없으며 法規, 風習 및 日常事에 있어서 社會的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은 건과 마찬가지이다.¹²⁰⁾

4) 結婚 및 家庭에 대한 國家의 保護

北韓 憲法은 第63條에서 結婚 및 家庭에 대한 國家의 保護를 규정하고 있다.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에서는 女性의 自由結婚과 結婚年齡을 女 17歲, 男 18歲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軍服務, 女性勞動力의 確保 등의 政治的·經濟的 이유로 대체로 男 30歲, 女 28歲 이상으로 結婚年齡이 제한되어 있다.¹²¹⁾ 그리고 서로 다른 階層간의 結婚은 禁止되며, 만약 그럴 경우에는 身分은 격하되고 平壤에서 居住할 수 없게 된다.¹²²⁾

5) 亡命 外國人에 대한 庇護權

北韓 憲法은 第66條에서 亡命庇護權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民主主義적이고 進步的이라고 자부하고 있다.¹²³⁾

실제로는 ‘시아누크’공이 北韓에 亡命한 것으로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시아누크공이 亡命庇護權을 최대한 향유하였다면, 민흥구하사, 김만철씨 일가족의 亡命에서 본파와 같이 自國의 海外亡命은 尊重되지 않는다.¹²⁴⁾

VI. 結 語

이상에서 北韓의 人權實態를 살펴보면 憲法上 基本權의 規範과 現實은 遊離되어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北韓에서의 人權은 진정한 의미에

118) 上揭書, p. 75; 金東漢, 前揭論文, p. 97.

119) Asia Watch & MLHRC, *op. cit.*, p. 40.

120) *Ibid.*, p. 41~43.

121) 1976. 8. 政務院 決定 및 귀순용사의 증언, 「北韓概要」, 前掲書, p. 82.

122) Asia Watch & MLHRC, *op. cit.*, p. 92.

1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前掲), p. 78; 金東漢, 前掲論文, p. 100.

124) 上揭論文, 같은 면.

서 존재치 않고 있으며, 憲法上的의 基本權規範은 名目化 내지 裝飾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sia Watch와 MLIHRC의 報告書는, 北韓의 人權狀況이 그동안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國家의 모든 權限이 指導者 1인에게 집중된 1人支配體制에 起因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⁵⁾ 北韓에서는 國家 및 社會體制가 一黨體制, 보다 구체적으로 金日成 1人獨裁體制的 維持에 귀착됨으로써 人權保障을 위한 制度가 오히려 人權蹂躪의 道具로 化하는 背理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人權保障의 최후의 堡壘여야 할 司法制度는 獨裁體制維持의 장치가 되고 있고, 平等하여야 할 社會는 社會階層의 分類로 모든 分野에서 差別를 낳고 있다.

이런 면에서 世界人權保護團體들이 北韓에서 드러난 人權彈壓의 事例들을 기초로 한 人權報告書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北韓의 열악한 人權狀況을 지적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北韓의 人權狀況을 다뤄본 것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人權狀況과 比較하는 次元에 머무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이 國際人權規約에 加入하여 國際社會에 人權保障을 약속한 상황에서 人權改善을 유도하고 진정한 人權保障을 실현토록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蘇聯 및 東歐 共產國家에서 부는 自由의 春풍이 스탈린主義의 마지막 孤島인 北韓에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智慧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北韓의 現實에 대한 분석은, 金日成 1人專權을 40년 이상 지속해 온 北韓體制的 開放化는 곧 金日成 唯一獨裁體制와 金正日の 世襲權力體制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體制危機意識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歐의 改革熱風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단기간의 變化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北韓專門家들 대부분의 견해이다.¹²⁶⁾ 北韓은 東歐國의 政治改革을 보면서 金日成의 을 新年辭에서 밝힌듯이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하고, 改革바람을 막기 위한 內部的인 思想教育強化를 서두르고 있다.¹²⁷⁾ 北韓의 '로동신문'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를 허용한다면 인민대중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125) Asia Watch & MLIHRC, *op. cit.*, pp. 7~8.

126) 鄭太和, "北韓, 그 개혁과 개방의 조건", 「月刊中央」, 1990. 3月號, p. 302; 金斗煥, "중국개혁열풍불기, 변화조짐없는 북한", 「월간통일」, 1990. 2月號, p. 50.

127) 「서울신문」, 1989年 12月 24日, p. 2.

사회주의사회 자체를 와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²⁸⁾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위기는 “물건의 빈곤에서 온 위기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의 빈곤에서 온 위기일 것”¹²⁹⁾이라고 하여 東歐事態에 대한 北韓의 意識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른 주목되는 北韓의 對處方案은 金日成의 秘密中國訪問, 東歐留學生의 緊急召還, 海外公館長들의 緊急會議開催 등에서 알 수 있다. 報道에 의하면, 北韓은 헝가리, 東獨 등 東歐 6個國에서 강제소환한 留學生과 技術者 2,000 여명을 연고가 없는 地方에 배치시키는 한편 蘇聯留學生 500 여명도 소환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¹³⁰⁾ 그러면서 北韓의 措置는 住民思想教育의 強化와 함께 召還者들의 集團的인 改革要求가 勢力化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³¹⁾

이러한 狀況을 감안할 때 北韓의 權力體制의 強化로 人權狀況은 오히려 惡化될 素地를 안고 있다. 正當한 民主化, 開放化, 人間化, 自由化에 대한 요구에 強權과 彈壓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석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편 北韓의 人權問題를 論議하면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南韓에서의 人權狀況이다. 우리는 北韓의 國際人權規約 不履行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規約에 加入조차 하지 않았던 ‘어저구니 없는 後進性’¹³²⁾을 보이다가 뒤늦게서야 그에 加入하게 되었다.¹³³⁾ 그동안 韓國은 經濟發展을 자랑하면서도 人權後進國이란 인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美國務部의 ‘1989 年 人權報告書’는 盧泰愚大統領 執權 후 1989 年 8 월까지 時局關係嫌疑로 총 2,094 명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315 명이 1989 年 중 체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⁴⁾ 그의 非民主惡法改廢의 부진, 北韓에 대한 言論의 報道規制, 勞動活動에 따른 독립적인 爭議

128) 「프랑스신문」, 1989 年 12 월 22 日(토설), p. 1.

129) 上揭新聞, 같은 면.

130) 1990 年 4 월 2 日 蘇聯에 유학중인 北韓大學生 남명철군과 박철진군도 亡命動機 중 하나가 蘇聯留學生에 대한 北韓의 소환조치가 임박했다는 소문에 있었음을 밝혔다. 「東亞日報」 1990 年 4 月 3 日, p. 15.

131) 「京鄉新聞」, 1990 年 3 月 1 日, p. 2.

132) 大韓辯護士協會 編, 「人權報告書」, 제 4 집(역사비평사, 1990), p. 8.

133) 우리 國會는 지난 3 月 16 日 臨時國會本會議에서 政府가 제안한 國際人權規約(A規約, B規約, B規約에 대한 選擇決定書) 加入同意案을 통과시켰고(다만, B規約에 있어서는 國內法과 상충되는 4개조항을 留保하였음), 政府가 그 加入書를 지난 4 月 11 日 UN 事務總長에게 기탁함에 따라 國際人權規約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 月 11 日로부터 우리나라에 發效되었다.

134) USIS, *op. cit.*, 1989 Human Rights Report 중 The Republic of Korea 部分, p. 4.

調整體制的 不備, 勞組와 敎社隊의 충돌에 대한 當局의 미진한 態度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大韓辯護士協會의 '1989년 人權報告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第6共和國에 들어와서 時局關係拘束者가 총 2,094명이며, 1일 평균 3.78명으로 第5共和國 때의 1.61명보다 2배가 넘고 있다.¹³⁵⁾ 그리고 1989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國家保安法 違反嫌疑로 구속된 사람은 342명으로 1988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252명임을 밝히고 있다.¹³⁶⁾ 이러한 수치는 人權狀況이 전년도보다 악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國際赦免委員會는 1990년 2월 23일 韓國에 대하여 모든 政治犯의 釋放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盧泰愚大統領은 '모든 억압과 고문'은 사라져야 한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아직도 갇혀 있는 良心囚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¹³⁷⁾ 許亨九 前法務部長官도 國會의 對政府質問에 대한 答辯에서 第6共和國 출범 후 1990년 2월까지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拘束된 사람은 모두 612명이며, 國家保安法, 集示法, 勞動關係法 違反으로 拘束된 사람은 모두 1,377명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¹³⁸⁾

분명코 拘束者數가 늘고 人權辯護團體에 의하여 이에 대해 거론된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 못된다. 先進 未來를 향한 우리의 歷史發展이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國際赦免委員會가 1990년 들어 첫번째 人權狀況改善 캠페인 對象國으로 韓國을 지정한 사실¹³⁹⁾에 自愧之心을 금치 못한다.

이제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의 民主化의 추진으로 人權先進國을 指向하여야 하며, 人權이 安保의 희생물이 되던 시대를 清算하여야 한다. 우리의 人權의 완전한 保障이 곧 北韓의 民主化·開放化를 유도하고, 나아가 北韓의 人權狀況 改善을 촉구하는 捷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5) 大韓辯護士協會 編, 前掲書, p. 33.

136) 上掲書, pp. 33~34.

137)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3일, p. 1.

138) 上掲新聞, 1990년 3월 1일, p. 1.

139) 上掲新聞, 같은 날, p. 3.

(Summary)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their Realities in North Korea

Chang, Myung-bong*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present) has an elaborate bill of rights. It provides for a chapter (Chapter 4) on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consisting of twenty-four articles.

Article 4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of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rticle 68 asserts that "Citizens must cherish their collectives and organizations and establish the revolutionary trait of working devotedly for the sake of society and the people and for the sake of the homeland and the revolution." These articles signify that individuals exist only for the benefit of the collective whole. This collectivism provides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a constitutional authority to encroach upon the personal and private life of individuals. Needless to say, the concept of individual rights is a mockery because it is supposed to be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Moreover, gaps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exist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to a much greater degree. The North Korean political reality does not even live up to even its own ideal; it is not relevant at all to its own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fundamental rights.

The pictur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fragmentary a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get reliable information from within or outside the country. The North Korean news media are totally state controlled and

* Professor, Dept. of Law

rarely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arrests, trials, prisoners, prisons o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even about the foundations of the country's criminal law. Access by representatives of foreign news media is severely restricted. The Government's practice of secrecy extends even to the Pe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lthough revised in 1976, these texts are not known to exist in public edi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ystem which consistently deprives its citizens of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 Government preserves this system by erecting walls of fear around its borders and around each of its citizens. It seeks to prevent its citizens from learning about their rights or about national or international means for vindicating those rights. Few foreigners are permitted to visit the country and even fewer North Koreans are allowed to travel abroad. Most foreign visitors who are allowed into North Korea are given carefully monitored tours of a few showplaces while being denied access to most of the country.

All North Koreans are expected to support enthusiastically their President, Kim Il-Sung, together with his son and heir apparent, Kim Jung-Il, as well as to conform to their policies. Those citizens who complain, do not conform, or fall out of political favor have been demoted and forced to move with their families to arduous labor. Those individuals who are perceived to oppose the Government have reportedly been arrested, beaten, ill-treated, imprisoned, forced to do hard labor, and given starvation ra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to evade international scrutiny by closing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ost other independent observers. Despite this limited access, those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gath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som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actices and to recommend certain improvements. Recently,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

tee' have published a report,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issued a special report, *Background to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publishing these report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ek to encoura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hange its human rights practices. At the same time, by maintaining our efforts to monitor human rights developments, we hope to open the closed door of North Korea, at least a crack.

여 백